

檢 수사권에 재갈 물린 靑, 공수처 안착이 관건

文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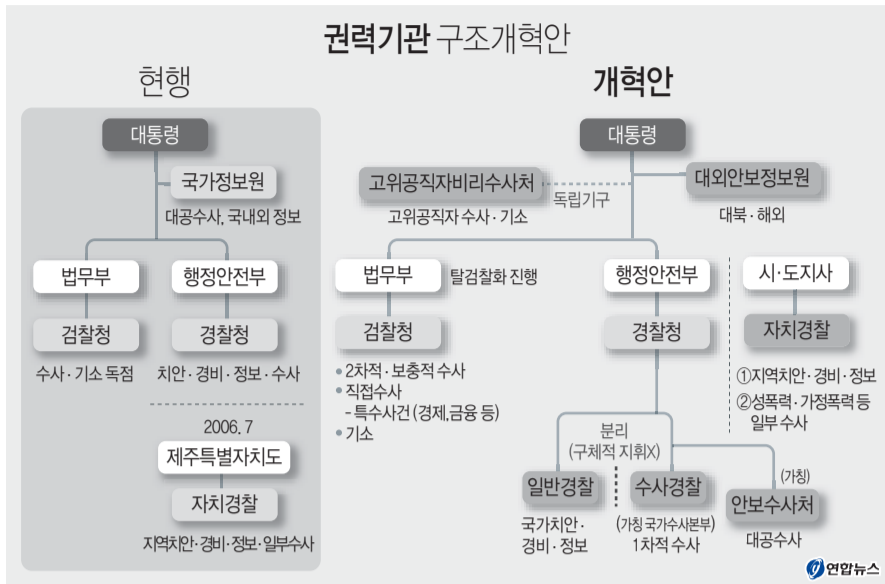
검찰의 '수사 총량' 줄여 권한 축소 경제 등 특수사건만 직접수사 한정 대공·안보 관련수사 경찰에 위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면서 권한이 통제되지 않아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해왔다는 것이 청와대의 문제 인식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기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근본적 검찰개혁 차원에서 1차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보완적인 2차 수사권만을 검찰이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지만, 청와대는 검찰이 일정 범위에서 계속 중요 사건 수사(특수사건)를 맡



을 필요로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일정 부분 남겨둔 채 '수사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실상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공수처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발족하는 한편, 검찰이 지금껏 도맡던 중요 사건의 1차 수사를 경찰에 넘기는 등 기존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지적이다.

또 검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을 우선 '경제·금융 등 특수사건' 중심으로 규정하기로 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검찰이 명분만 있으면 '중요 사건'을 이유로 1차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 영향을 지대한 검찰공안부서의 선거사범 수사 기능도 경찰에 대폭 이양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청와대가 제시한 방안대로

라면 검찰의 권한 내려놓기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과, 다른 한편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수사기관 간 운용의 묘를 통한 실행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점에서 올해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결과와 제도 개선 속도에 따라 비대해진 검찰권 분산·조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의 이날 발표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대공, 안보 관련 수사는 앞으로 경찰이 도맡게 됐다.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만들어 그동안 이들 3개 기관이 해오던 대공·안보 수사를 한데 모아 담당하겠다는 것이 핵심 개편안이다. 최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개편안의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대공수사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와 달리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안보수사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에서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된다. 안보수사처 조직은 아직 입법화 등 과정이 남아있지만, 기존 경찰이 보유한 보안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운영 중인 경찰청 본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43개의 보안수사대를 중심으로 꾸리되 국정원과 검찰에서 담

당하던 대공수사 기능을 포함하면서 조직을 넓히는 형태가 된다는 의미다. 경찰이 가져오는 기능에는 수사의 사전 단계인 첩보수집 기능까지 포함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첩과 관련, "우리가 하던 대공수사가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국내에는 물론 해외 연계 부분 등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대공수사 기법이나 그간 갖춰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지원받아 공백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 및 진압 ▲용산 화재 참사 등 5건에 대해 우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5건은 경찰이 공권력을 개입해 인권침해가 이뤄졌던 주요한 사건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민간 중심으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과정에서 경찰권이 잘못 행사됐거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조사해 사건 진상과 원인, 재발 방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 '청춘의 미래를 위한 부산'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조 수위 올리는 국민의당-바른정당

사실상 주축 '통합선언' 앞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사실상의 '통합선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대표는 이번 주 초 '통합 신당'의 창당 정신, 정체성, 정치개혁 등을 제시하는 정치개혁선언문(가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표는 선언문 내용을 두고 마지막 조율 중이며, 조율이 마무리되면 기자회견 형식의 공동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통합선언을 하기로 한 데에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지난 12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2·4임시전당대회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반대파는 "날치기 의결"이라며 반발하면서, 전당대회 무효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거나 집단 탈당 등을 결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통합 반대파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대표의 군사쿠데타식 불법 당무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수야합 불법 전당대회를 저지무산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하여 재창당하는 길과 함께 새로운 개혁신당

의 길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개혁신당창당추진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찬성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전당대회에서의 합당한 의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15일부터 김중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열어 전대시행세칙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명부 정리작업과 함께 사전투표 실시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통합 준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두 대표는 상징적인 통합선언을 통해 양당의 통합을 기정사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유 대표가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를 확실히 결정한 만큼 전당대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찬성파에 '분격적 힘어주기'에 나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앞서 유 대표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론을 펼쳐오다 최근 통합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실질적인 공조 수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통합추진위의 체를 통해 국민의당 전당대회 이후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 당명 공모, 정당정책 조율 등 준비를 위해 갖은 만남을 통한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원 기자

여야, 인재발굴 vs 조직결집... 지방선거 분주

6·13 지방선거 5개월여 앞으로 민주당 '인재발굴위원회' 구성해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분주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고공행진 분위기 속에 인재발굴과 영입 방안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투톱'을 중심으로 여론전을 통한 보수 세력·조직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재발굴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원이 급증했으며, 현재 높은 지지율이 이어지면서 출마 희망자도 넘치고 있어 고무적인 분위기다.

때문에 당 내부의 우수 인재를 찾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이에 준비위원회의 명칭도 기존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닌 인재발굴위원회를 잠정적으로 정한 상황이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반발이 있어왔던 만큼 이 부분을 줄임으로써 부담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위원회를 통해 발굴·영입된 인재에 대해 지방선거·재보궐 선거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략공천' 등 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는 분위기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이하 전략공천이 원천 금지돼 있지만, 발굴·영입 인재에 대한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현재처럼 전략공천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장담하기 어려울 뿐더러 발굴·영입 인재가 당내 경선에서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시스템 공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

에 10% 이내의 제한적 전략공천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인 여론전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와해된 보수 세력과 조직의 결집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일 대구·경북 지역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누비며 문재인정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홍 대표의 행보는 15일 부산·울산, 16일 서울·강원, 17일 호남, 18일 인천·경기, 19일 제주 등 이번 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홍 대표의 행보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당 지지율을 현 정부와 강한 대립각을 세우며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택 등 설 대비 합동점검

대형마트·아울렛 등 소매점포 대상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간 33㎡(10평)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판매가격 표시, 단위 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등에 대해 17개 시·도의 자체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아울렛

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 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가 미비한 상점 가 내 연구점과 약기점, 운동용품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